

1

‘격차사회’ 일본과 빈곤층 재생산

— 고용·소득 격차에 의한 저축·교육 격차의 확대를 중심으로

양준호



■ (위) 도쿄 스미다가와 근처의 홀리스 주거 천막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부유층 주거지역으로 유명한 롯폰기 지역의 전경, 집회를 바라보고 있는 홀리스 노인, 롯폰기 모리타워 앞에서 시위 중인 파견노동자



1. 들어가며: ‘격차사회’ 일본과 그 배경

가까운 일본 역시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양극화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의 거품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일본의 소득격차는 1998년 이후부터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그 증거로서 일본 경상소득의 지니계수¹⁾가 1990년 0.433에서 2002년 0.498로 크게 상승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이 수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거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5라고 하는 것은 국민 총소득의 4분의 3을 4분의 1의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일본의 소득분배는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중류층이 해체됨으로써 심각한 빈곤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하였는데, 2006년 OECD가 발표한 각국의 소득분배와 빈곤 현상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빈곤율은 1995년 8%에서 2005년 15.3%로 급상승하여 OECD 가입국 중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에 이르렀다. 게다가 최저생활비 수급자

* 지은이 | 양준호 일본 교토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교토대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인천대학교 동북아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제도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조절이론)과 동북아시아경제론이며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소득 및 금융 양극화 문제, 사회적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업에 학문적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 『北東アジアにおける経済連携の進展』(공저), 『교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업과 지역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서』, 『식민지기 인천의 기업 및 기업가』, 『현대자본주의분석』(공저) 등이 있다.

1) 지니계수(0~1)가 0에 가까우면 소득분배가 균등, 1에 가까우면 불균등함을 의미하며, 통상 0.4를 넘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균등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 1995년의 60만 세대에서 2005년의 100만 세대로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볼 때도 일본의 소득양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소득양극화로 인해 전후의 일본사회를 지탱해 오던 거대 중산층이 해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전후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전국민이 중산층’이란 의미의 ‘1억 총중류’(1億 總中流) 의식이 최근 와해되고 있으며, 또 소득양극화는 사회 전체의 중산층 비율을 축소시킴으로써 ‘프리터’(Freeter)²⁾,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³⁾와 같은 다양한 사회계층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본 중산층 해체의 문제, 즉 소득양극화로 인한 계층사회의 형성을 두고 최근 일본의 지식인 사이에서는 ‘일본의 1955년 체제는 ‘중류화’를, 2005년 체제는 ‘계층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성행하고 있을 정도이다.⁴⁾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는 소득양극화로 인한 최근의 사회분열의 위기를 ‘또 다른 분단국가(分斷國家)의 탄생’ 또는 ‘격차사회, 일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소득양극화 문제와 또 이로 인한 다양한 격차문제는 일본 내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격차사회, 일본’이 나타난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 ‘정리해고’를 들 수 있다. 1998년 이후 대대적으로 단행된 일본 기업들의 ‘정리해고’ 등 인적 구조조정은 일본의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를 들 수 있다. 즉 임금노동자 간 임금격차의 확대가 저소득층을 양산한 것이 소득양극화를 초래한 것이다. 셋째, 재정 및 조세정책의 변화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즉 복지 축소 및 소득분배의 누진성 약화를 기조로

2) ‘프리터’란 ‘Free’(영어)와 ‘Arbeit’(독어)의 합성어로 일하고 싶은 의욕은 가지고 있으나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고용형태를 지칭한다.

3) 진학 및 취직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으며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젊은이들을 지칭한다.

4) 도쿄 롯폰기(六本木)힐즈의 월세 220만 엔(약 3천만 원)짜리 최고급 맨션에 살며 자가용 비행기까지 소유한 사람들과 예금 잔고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롯데힐즈족과 프리터족의 사회’라는 유행어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한 재정·조세정책이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득격차를 확대시켰다는 것이다.⁵⁾

본고에서는, 일본의 ‘격차사회’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⁶⁾ ‘격차사회’ 일본의 고용 및 소득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상을 관련 통계에 의거하여 살펴보고,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격차가 저축 및 교육과 같은 개별 가계의 기본적인 요소의 격차를 초래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생활’이 이전과는 달리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본고는, 일본의 ‘격차사회’를 고용·소득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주로 각 영역에 관한 미시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⁷⁾ 고용 및 소득 영역에서

5)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사회보장비가 대폭 삭감되었으며 소비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감소되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상속세 감면조치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등의 정부조치는 고소득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득세의 소득계급별 세율 추이를 보면, 1986년에는 최고세율이 70%까지 달하였으나 현재는 37%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전의 소득세율은 15개 계층으로 세분하여 적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10%, 20%, 30%, 37%로 계층 수가 크게 감소하여 소득세의 누진도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6) 물론 1990년대 이후의 일본에서 ‘격차사회’가 진전되고 있지 않거나 진정한 의미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논의로서는 다음의 두 글을 거론할 수 있다. 大竹文雄, 『日本の不平等』, 日本経済新聞社, 2005; 内閣府, 『月例経済報告など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資料, 平成 18年 1月』, 2006. 이와 같은 논의는 일본의 ‘전국소비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의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을 인구 고령화로 지적하고 또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 심화된 격차는 진정한 불평등화 현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 절차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먼저 약 5만 세대의 미시 데이터를 세대주의 연령계층별로 집단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집단별로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지니계수’ 및 ‘대수분산’의 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연령계층별 지니계수를 특정 시점에서 관찰하면, 그 값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계산된 지니계수가 1980~90년대에 일관된 형태로 상승하게 된 원인을 인구 고령화에 의해 원래 소득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는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늘어난 것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의해, 격차의 확대는 그저 ‘표층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의 ‘전국소비실태조사’, 공표조사 결과와 그 직전에 공표된 1999년 조사결과를 주의 깊게 비교해서 보면, 1999년에서 2004년까지의 시기에 ‘표층적’이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격차확대, 즉 연령계층 내 경제 격차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대속성별 연간수입의 지니계수’라고 하는 표에는 ‘전세대’와 ‘근로자세대’와 같은 두 가지 집계 구분을 통해 연령계층별 지니계수가 계산되어 있다. ‘근로자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노동자인 세대를 의미하며, 여기에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세대를 추가한 것이 ‘전세대’가 된다. 1999년과 2004년의 연령계층별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전세대’와 ‘근로자세대’ 모두 60세 미만의 모든 연령계층에 있어서 지니계수는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형태의 지니계수 상승 현상은 1980년대 및 1990년대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근로자세대’ 중 25~59세까지의 연령계층별 지니계수의 단순평균을 계산해 보면, 1999년이 0.217, 2004년이 0.226으로, 그 상승률은 4%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승률은 30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있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청년층의 격차확대 현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7) 우니 히로유키는 일본의 ‘격차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진전되고 있는 양극화가 중층적으로 조합된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임금격차 부분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검토에 그치고 있다(宇仁宏幸, 『賃金の不平等化と労働制度の変化』, 『現代思想』, 2007년 7月号).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격차 심화를

심화되고 있는 격차가 각 영역 간 인과관계에 의거하여 진전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격차사회’ 현황을 보다 총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의 이와 같은 분석 시각은 선행연구와는 다른 특징이자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고용 및 임금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데 반해, 본고에서는 선행연구가 간과해 왔던 개별 가계의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저축 및 교육의 격차문제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점 역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용 및 임금소득과 같은 노동시장적 요인의 격차를 저축 및 교육과 같은 지금 일본인들의 생활 패턴을 규정하는 요인의 격차를 초래한 원인으로 파악하였으며, 동시에 저축 및 교육 환경을 일본인들의 ‘생활’ 변화에 큰 규정성을 갖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일본 내 ‘격차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고용 및 소득격차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3절에서는 고용 및 소득격차의 귀결로서의 저축 및 교육 격차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결론을 논하고자 한다.

2. 일본 내 ‘격차사회’의 심화 : 고용·소득 격차 현상을 중심으로

1) 고용격차

‘격차사회’ 일본에서는 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줄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 가는, 이른바 ‘고용격차’ 또는 ‘고용양극화’ 문제가 ‘격차’문제 중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노동자의 고용형태 또는 근로형태의 양극화 현상이 모든 격차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 때는, ‘단카이 세대’⁸⁾가 대표적이듯이, 수많은 구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일본의 ‘격차사회’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8) ‘단카이 세대’(団塊世代)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서 1949년까지 있었던 일본의 베이비 붐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제1차 베이비붐 세대¹⁾로도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 그 인생을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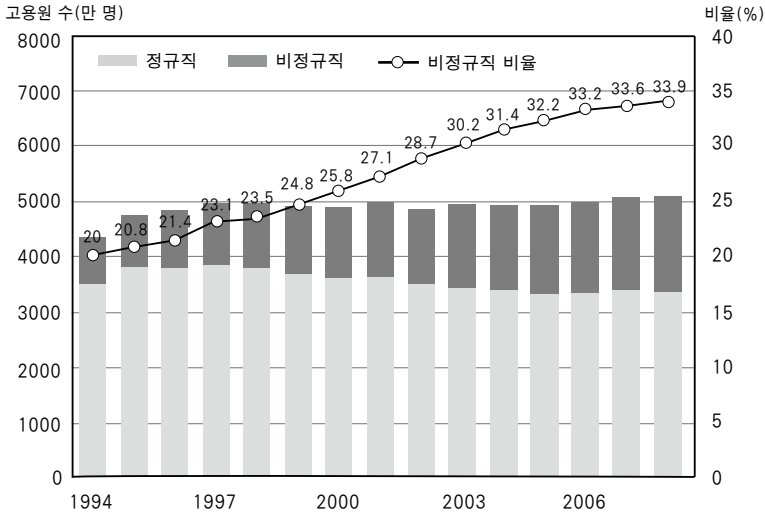
자가 집단적으로 지방에서 대도시로 취직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취업자들이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후에는 이와 같은 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다.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 사회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장기불황이 지속되었으며, 버블 붕괴로 인한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본 기업들은 업적 악화에 허덕이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경상경비 삭감을 위해 신입사원 채용을 기피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잉여 노동력으로 평가되는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는 인적 구조조정이 전국적 규모로 단행되었다.⁹⁾ 그 결과,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게 된 청년층과 구조조정된 중·장년층이 급격하게 증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정규직 노동자는 점차 줄기 시작하였으며,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대폭 증대하는 현상이 현저해지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은, 장기불황에서 벗어난 2002년 이후의 ‘전후 최장의 경기확대’ 국면에서조차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페이지의 <도표 1>은 일본 총무성 통계국이 시행한 「노동력조사」에 의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규직 노동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도성장기 일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대에서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전체 노동자의 약 3분의 1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진국의 노동 또는 고용 환경치고는 매우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평가되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고용과 관련한 노동자의 인권을 상대적으로 철저히 존중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청년들의 실업률이

해 오면서, 이른바 전체로서의 ‘일본적 사회경제시스템’에 정합적으로 작용되어 온 개체로서의 세대집단을 의미한다.

9) 전후 줄곧 ‘종신고용’을 보장해 온 일본의 대기업들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불황으로 인해 오랜 기간 업적 악화에 허덕이게 되자, 정부의 국내 수요대책 및 경기대책을 포기하고 결국 대대적인 ‘종업원 청소’를 단행하기에 이른다. 예를 들어 ‘종신고용’의 상징이었던 마쓰시타전기는 2001년 한 해에만 무려 1만 3천 명을 감원하는 등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하였다.

〈도표 1〉 일본의 정규직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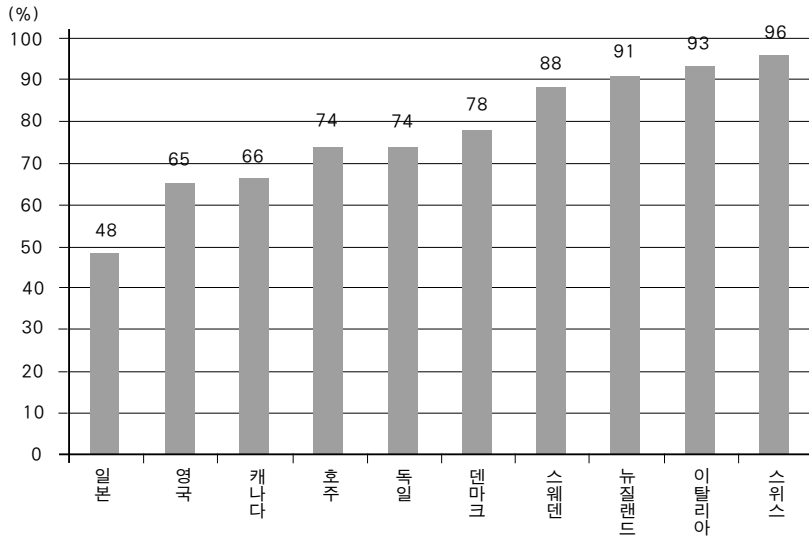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상세집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일본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속하게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도표 2〉는 주요 OECD 회원국들의 파트타임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풀타임 노동자와 비교해서 볼 때 시급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를 국제비교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통계이다. 〈도표 2〉를 통해, 일본의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임금은 풀타임 노동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버블경제 붕괴 이전까지만 해도 ‘1억 총중류’ 사회로 불릴 정도로 평등 지향성이 매우 강했던 일본사회에서, 이와 같이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임금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의 일본사회가 매우 큰 구조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기존의 여러 논의에서

〈도표 2〉 파트타임 임금의 국제비교



출처: OECD, "Taxing Wages", 2004/2005

주: 도표의 수치는 파트타임 노동자 임금의 풀타임 노동자 임금에 대한 비율(시간급 기준)이다. 또 스웨덴의 경우, 기능직 및 노무직과 그 이외의 노동자 임금의 단순평균을 활용하였다. 나아가 OECD 회원 국가 간에도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정의에 의해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거론되어 왔던 일본경제에 경로 의존적으로 작용하고 있던 미시적 기초, 예를 들면 종신고용, 연공서열제, 전 국민의 중산층 의식 등이 지금은 이전과 같이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일본경제의 새로운 작동방식 또는 축적방식에 대한 추측 역시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파트타임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6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 및 스위스에서는 9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파트타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사이에 왜 이와 같은 극심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 기업들이 종신고용 및 연공서열적 임금 등과 같은 매우 보수적인 일본형 고용제도 또는 임금제도를 중시해 왔기 때문에, 공채로 채용되어 처음부터 동일선 상에서 근속 경쟁을 벌이지 않는 정규직 노동자가 외부에서 유입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신들의 직계 직원 또는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 풍토가 지금까지도 일본 기업 내부에 매우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다.¹⁰⁾ 일본 기업들은 아직까지 '비정규직은 일회용'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¹¹⁾

둘째,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턱없이 낮은 수준의 임금문제에 대해 무지한 것 역시 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파트타임 노동자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이 심각한 수준의 저임금으로 착취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경영자는 이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도표 2>를 통해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타국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이에 대한 실증적 문제의식 및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¹²⁾ 따라서 지금의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나치게 낮은 임금 수준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에게는 인건비 등의 경비를 삭감하여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일본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와 같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자신들의 상황에 정합적인 형태로 해석·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평등한 임금 문제에 대해 집단적 대응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경영자들은 상대의 무방비 상황

10) 일본의 경우, 장기고용(종신고용), 연공서열적 임금,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일본형 고용제도하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조직에의 '귀속'에 가치를 두고, '노동' 그 자체에 대한 가치 부여를 경시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11) 가쓰마 가즈요(勝間和代)는 일본 기업들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응을 법적 구축을 통해 감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勝間和代, 「非正規雇用者が増えた理由を理解し、政府と企業の取り組みを監視しよう!」, 『業界NEWS』, 株式会社 ソリューション アンド パートナーズ(SAP), 2010년 4月号.

12) 우니 히로유키(宇仁宏幸)는 이와 같은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급의식 결여의 원인을 정규직 노동조합의 무능함에서 찾고 있다. Uni Hiroyuki, "Wage Inequality and Employment Inequality in Japan", Incheon University and Kyoto University Joint Seminar, Economic Structural Change in Korea, China and Japan, 2010.

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임금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¹³⁾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기업 내부에서 집단적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일본 기업으로부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 및 임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험노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행정서사, 사법서사 등과 같은 이른바 ‘돈 되는 자격’을 취득하여 노동을 착취하는 경영자에 대해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전문직’, 즉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¹⁴⁾ 기업으로부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¹⁵⁾ 이는 이전의 일본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생활방식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결국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고용격차가 심화된 원인으로서는 일본 기업이 1998년 이후 대대적으로 단행한 ‘정리해고’ 등 신자유주의적 인적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분으로 한 ‘근로자파견법’ 등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특히 고이즈미 정권 이후 개혁의 폭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고이즈미 정권 이전에도 근로자파견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지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해 그 성과는 미미했다. 고이즈미 정권은 ‘고용대책임시특례법’을 시행하여 근로자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

13) Uni Hiroyuki, "Wage Inequality and Employment Inequality in Japan".

14) 일본 에히메현의 공적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적 지원기관이 원스톱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결국 일반 민간 기업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그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경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청자 수는 매우 적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위해 공적 교육 및 지원 기관이 아니라 사적 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에서도 양극분화 현상이 초래될 위험성이 매우 큼을 보여 주고 있다.

15) 최근 일본에서는 자격 강화 및 통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사설 학원의 수강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른바 ‘전문직’ 붐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 교육기관에서는 주로 대학 졸업생 및 기업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으로의 취업이 아닌 전문직으로서의 활동을 목표로 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높일 수 있도록, 주로 토익 및 토플 등의 어학 자격 취득, 공무원 시험, 취직 시험, 대학원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준비와 같은 다양한 ‘커리어 업’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는 규제개혁을 대대적이고도 강권적으로 단행하였다. 또 기업은 이러한 노동 개혁에 편승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선호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확대가 고착화되기에 이르렀다.¹⁶⁾ 따라서 일본에서는 고용격차의 심화가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청년층의 급증이 대량의 저소득층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15~34세 노동인구 중 ‘프리터족’의 비중이 2001년의 21%에서 2004년 25%로 급증했는데, ‘프리터족’의 평균소득은 연간 100만 엔~200만 엔(정규직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여 자신과 자녀를 위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소득격차가 대물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즉 정리해고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인적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역시 일본의 고용격차 및 소득격차를 급진전시킨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 소득격차

연봉 수입 등의 격차, 즉 소득격차는 흔히 말하는 ‘격차사회’를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일본 역시 소득격차, 특히 연 수입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약육강식’의 시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전의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의해 국민 전체의 생활이 풍요로워짐으로써, 이른바 ‘1억 총중류 사회’로 불려 왔다. 회사에 취직을 하기만 하면, 개인은 종신고용 및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에 의해 죽을 때까지 풍요로운 생활을 회사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고도성장기의 일본인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인생의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육받았으며, 또 그렇게 인식해 왔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의 버블 붕괴 이후 일본사회를 덮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으로, 일본인의 생활을 보장해 왔던 위와 같은 제도적

16) 남녀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확대 추세에 있으나 남성 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더욱 현저하다. 특히 비정규직 중 청년층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커지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의 격차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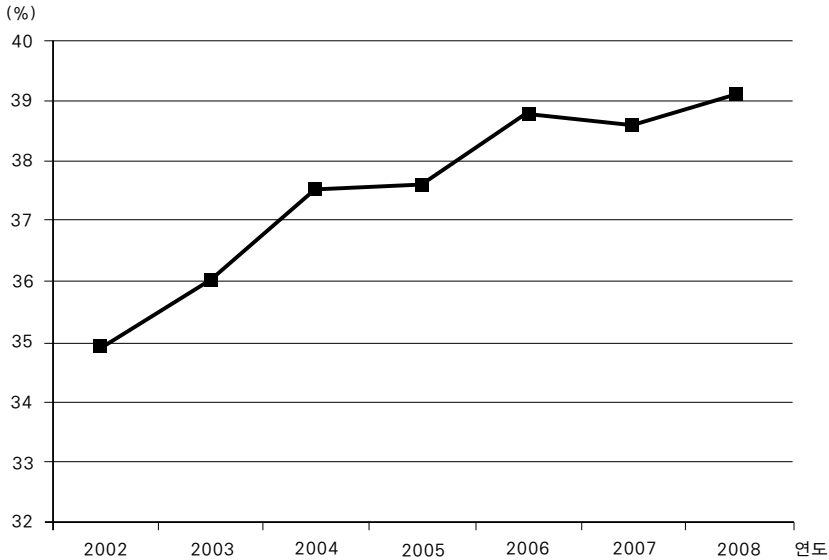
체제는 크게 변화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고도성장은 종언을 맞이하였고, 그 반동 효과로 볼 수 있는 장기불황이 지속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자랑하는 글로벌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의 업적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 결과 인건비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구조조정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을 평등하게 지불하지 않게 되었는데, 특히 이 시기부터 일본 기업은 성과주의적 임금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¹⁷⁾ 이 제도에 의해 높은 성과를 내는 정규직 노동자는 고액의 연봉으로 대우받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는 낮은 수준의 연봉밖에 받지 못하거나 또 구조조정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일본 기업에서는 동료 간에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출세 방법이라 교육을 받아 온 대부분의 청년들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와 같은 기업 내부의 ‘시장적 조정’에 잘 적응하여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봉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최근 일본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한 그룹이라는 의미를 담은 ‘가치구미’(勝ち組)로 부르고 있으며, 경쟁에서 패배하여 낮은 수준의 연봉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그룹을 ‘마케구미’(負け組)로 부르고 있다.¹⁸⁾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두 용어는,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가 기존의 평등주의적 임금체계 및 안정적인 고용구조에 의해 지탱되어 온 평등 지향성을 지양(止揚)한 결과, 새로운 계급사회가 탄생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

17) 宇仁宏幸, 「日本における賃金格差拡大とその要因」, 『季刊経済理論』 第45巻 第1号, 2008.

18) 여기서의 ‘가치구미’ 및 ‘마케구미’는 일본어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현재 일본인들이 ‘격차사회’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또 이를 그 상징적인 단어로 활용하고자, 우리말로 바꾸지 않았다. 굳이 우리말로 변환하면, 이는 ‘승자그룹’ 및 ‘패자그룹’ 또는 ‘사회적 강자’ 및 ‘사회적 약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3〉 전체 노동자 중 연 수입 300만 엔 이하 노동자의 비중



출처: 일본 국세청 2009년 「민간급여실태통계조사결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약육강식’의 시대가 일본에 도래함으로써, ‘격차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한 사람들은 큰돈을 벌며 이른바 ‘가치구미’로 군림하고 있으며, 반대로 ‘격차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사 및 정부에 의해 착취되는 ‘마케구미’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다.¹⁹⁾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최근 일본인들은 연봉 격차 등과 같은 소득격차 현상을 격차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의 유무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개인의 능력 제고에 대한 투자가 이전과 같이 기업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교육 및 숙련형성 시스템이 아니라 주로 사교육과 같은 기업 외부의 교육 인프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인들은 이전과 같이 기업 내부 노동시장에서 체득하게 되는 산업 특수숙련(Industry Specific Skill) 또

19) 미우라 아쓰시(三浦展)는 이른바 ‘마케구미’로 전락하게 되는 원인을 노동시장 내에서의 경쟁 패배로 보지 않고,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산 및 교육 환경에서 찾고 있다. 또 이와 같은 ‘마케구미’는 세대 재생산으로 이어져, ‘하류계층’으로 불리는 새로운 빈곤층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계층이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三浦展, 『下流社会: 新たな階層集團の出現』, 光文社新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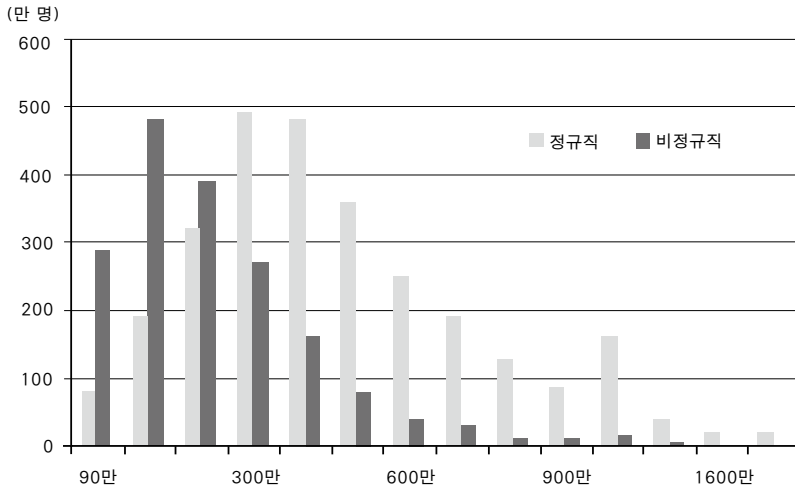
는 기업 특수숙련(Firm Specific Skill)이 아니라 범용적이고도 일반적인 숙련 및 전문성(General Skill)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보이게 되었다.

〈도표 3〉은 일본의 연봉 300만 엔 이하 샐러리맨 비중의 최근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비중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연봉 300만 엔 이하 노동자의 비중은 35% 정도였으나, 2008년에는 39%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즉 일본 전체 노동자 중 약 40%에 해당하는 인구가 연봉 300만 엔 이하의 이른바 ‘마케구미’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성과주의적 임금제도에에서 격차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존 자산·노하우·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마케구미’로 전락했고, 이들의 기업 및 정부의 제반 조치에 대한 무지를 회사와 정부가 이용하여 착취하고 있음을 거론할 수 있다. 서민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정부의 증세 조치나 위장청부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반대로 1,000만 엔 이상의 고수입 정규직 샐러리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노동자의 연 수입을 계층별로 나타내고 있는 〈도표 4〉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주로 300만 엔 이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300만 엔에서 500만 엔 이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도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1,000만 엔 이상의 고수입 계층의 인구분포가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즉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연 수입 500만 엔 이상의 계층에 속하는 인구분포는 점차 줄어들다가 연 수입 1,000만 엔 선에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도표의 연 수입 1,000만 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격차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는 계층으로 보인다. 이들은 ‘격차사회’하에서 기업과 정부의 임금 및 고용 구조조정의 원리 및 함의에 대해 통찰하고 있는 계층인 동시에, 개인 투자에 의해 큰돈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가치구미’로 불리는 계층이다. 이와 같이 ‘격차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

〈도표 4〉 연 수입 계층별 인구분포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중 「노동력조사상세결과」(2007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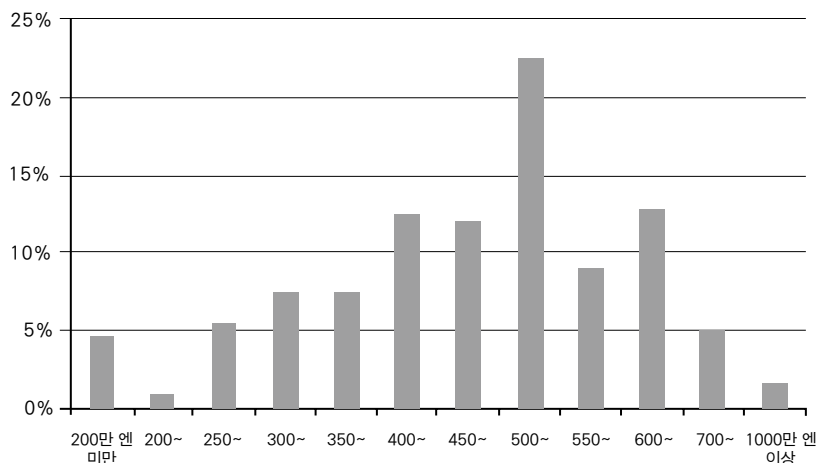
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양극화가 연 수입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표 5〉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넷카페 난민’²⁰⁾ 또는 ‘워킹 푸어’²¹⁾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본의 30대 내부의 연 수입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30대 내부에서는 무려 1,000만 엔 이상의 연 수입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카페 난민’ 및 ‘워킹 푸어’ 계층의 연 수입이 100만 엔 정도인 것에 비해서, 성과주의 임금체계하에서 이른바 ‘가치구미’로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엔을 넘어, 연 수입 격차는 무려 10배에 달하고 있다.

20) 노숙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없어 PC방(일본에서는 ‘인터넷 카페’로 부름)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전까지 살고 있던 자택 등의 주거공간으로부터 제반 사정에 의해 퇴거되어 24시간 영업을 하는 PC방 또는 만화카페 등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일용직 파견노동으로 불리는 고용형태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21) 영어 ‘Working Poor’를 그대로 쓰고 있는 최근 일본의 유행어로, 정규직 노동자와 거의 같은 시간 및 내용으로 일하거나 또는 정규직 노동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가족은커녕 자신의 노동력조차 재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계층을 의미한다.

〈도표 5〉 일본의 30대 내부의 소득격차



출처: 일본 국세청 2009년 「민간급여실태통계조사결과」

연 수입 200~250만 엔 구간에 속하는 30대 인구분포는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연 수입 200만 엔 이하 구간의 경우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데, 이는 이 구간에는 일본의 ‘격차사회’가 낳은 희생자인 ‘넷카페 난민’ 및 ‘워킹 푸어’로 불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샐러리맨’, 경영자, 특수 자격 보유자 등 1,000만 엔 이상의 고수입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이는 ‘넷카페 난민’ 및 ‘워킹 푸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의 30대 내부에서도 ‘격차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하여 큰돈을 벌며 ‘가치구미’로 상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30대 내부의 현저한 소득격차 현상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30대의 경우는 사교육기관 등의 사적 경로를 통한 개인 능력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5년 이후 경기회복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시기 이후에도 일본의 고용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규직 고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

〈표 1〉 일본의 노동자 형태에 따른 연 수입 계층별 분포 상황

노동자형태 연 수입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파트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	파견 노동자	계약 및 위탁노 동자	그 외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 엔 미만	2.52%	42.99%	54.91%	17.92%	12.23%	26.36%
100만 엔~ 200만 엔 미만	10.29%	33.44%	34.82%	32.08%	31.29%	27.13%
200만 엔~ 300만 엔 미만	18.26%	12.12%	6.25%	30.19%	27.34%	15.50%
300만 엔~ 400만 엔 미만	19.78%	4.96%	1.43%	13.21%	14.03%	9.30%
400만 엔~ 500만 엔 미만	15.44%	2.02%	0.45%	2.83%	6.47%	5.43%
500만 엔~ 700만 엔 미만	18.02%	1.29%	0.09%	0.94%	3.96%	6.20%
700만 엔~ 1,000만 엔 미만	12.11%	0.80%	0.09%	0.00%	1.80%	5.43%
1,000만 엔~ 1,500만 엔 미만	3.16%	0.18%	0.00%	0.00%	0.36%	1.55%
1,500만 엔 이상	0.42%	0.00%	0.00%	0.00%	0.00%	0.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중 「노동력조사상세결과」(2007년 평균) 개요 속보

주: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러 고용형태에 따른 연 수입 계층 중 70만 엔 미만은 표에서 제외했음.

으며, 또 비정규직 노동은 점차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소득격차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은 정규직 노동자 및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 수입 계층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1〉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교해서 보면, 정규직 노동자의 약 87%가 연 수입 200만 엔 이상임에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 중 특히 파트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연 수입은 200만 엔 미만이 약 88%로 나타나, 양자 간의 소득 양상은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 내용 및 근로상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양자 간 연 수입 격차는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으나, 위의 표를 통해 그 격차가 예상 외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추측

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값싼 임금을 지불하여 줄인 인건비를 정규직 노동자에게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그런데 앞의 표에 활용된 통계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노동자의 연 수입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고용의 안정성, 복리후생, 사회보험, 퇴직금, 기업연금, 교통비 등과 같은 종합적인 대우를 고려하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는 보다 큰 대우의 격차가 존재하게 된다.

전체 노동자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서 볼 때 지나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 이상으로 점차 늘어나는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대우 면에서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완전실업률상의 취업자로서 집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 처리는 격차사회에 대한 아무런 대응을 내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업에 고용되어 일단은 취업자가 되지만,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실업 예비군으로서, 즉 실업자에 가까운 상황에 처한 존재이다. 물론 일본의 완전실업률의 산출방법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고용기간 및 소득 면에서 크게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고용 상황은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표 1>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통계는 단시간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는 파트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연 수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 수입 계층 분포를 하향 평준화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한 통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견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위탁(촉탁)노동자, 그리고 그 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연 수입 100만 엔 미만이 약 20%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파트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 연 수입 100만 엔 미만이 약 55%로 나타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연 수입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위탁(촉탁) 노동자, 그 외의 비정규직 노동자

의 연 수입만 보더라도 연 수입 400만 엔 이상은 전체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연 수입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격차사회’ 일본의 빈곤층 확대 및 재생산: 저축·교육 격차 현상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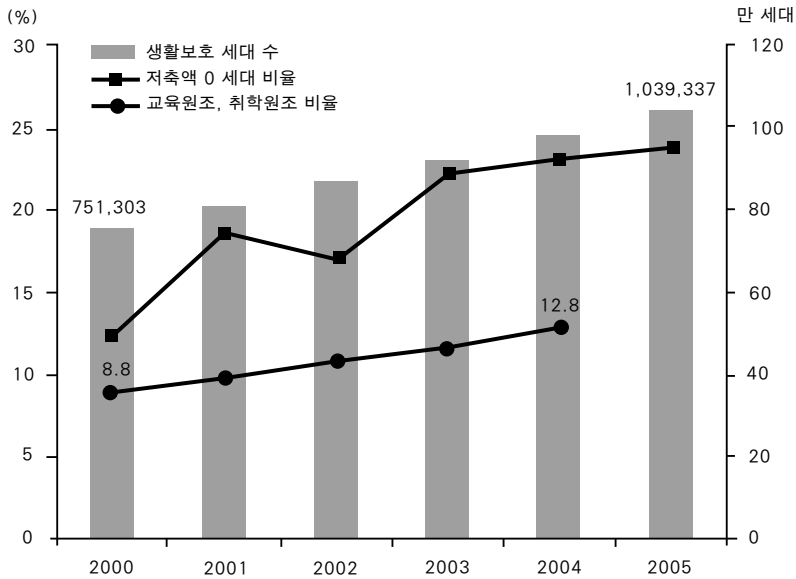
1) 저축격차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일본사회 내에서는 ‘가치구미’로 불리는 일부 고소득층에 부가 집중하기 시작한 반면에, 저축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저축격차’로 표현되는 새로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부터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저축 지향성이 매우 높은 사회로 평가되어 왔다. 그래서 일본인의 높은 근검 절약적 성격을 증명할 때면 늘 저축률 등과 같은 저축 관련 데이터가 실증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다양한 지표를 통해 볼 때, 분명 일본은 ‘격차사회’에 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압도적인 저축률을 보이는 등, 저축에 대한 지향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게 나타났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학제 간 연구에 의해 보다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일본의 높은 저축률은 일본만의 특수한 사회적 역사에 의해 규정된 관습 및 규범이 경로 의존적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임은 틀림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사회에는 수집가가 많고 저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등, 전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모으고 비축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는지 모른다. 반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가치구미’로 불리는 일본의 고소득층은 일본의 높은 저축률 현상을 일본인들은 자산운용 및 돈 자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저금에만 경도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²²⁾

22) 노무라 애셋 매니지먼트(野村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가 일본의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단카이 세대 또는 시니어 세대 중 부유층에 해당되는 가구의 저축 이외의 자산운용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이들은 과거 일본의 높은 저축률은 지나치게 강한 금융규제의 유산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부유층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일본 정부는 미국과 동일한 정도의 금융규제 완화를 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野村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第5回意識調査, 投資信託に対する意識調査』, 2010.

〈도표 6〉 일본의 저축 관련 추이



출처: 일본 금융광보중앙위원회 「가계의 금융자산에 관한 여론조사」(2006년), 총무성 「가계조사」, 내각부 「국민 생활백서」(2006년)

그러나 '격차사회'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일본에서 '저축액 0'인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가계의 자산을 저축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활고로 인해 저축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저축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저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도표 6〉은 일본 내 '저축액 0' 세대의 추이 및 취학원조 및 생활보호 대상 세대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도표에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듯, 일본 내 '저축액 0' 세대가 2000년의 12.4%에서 2005년에는 무려 약 25%까지 급상승하였다. 이 상승 추세는 매우 급격한 것으로 5년 만에 2배나 늘어난 것은 매우 현저한 트렌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²³⁾

23) 데이터의 제약상, 본고에서는 2005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비공개 데이터 및 관계자, 그리고 관련 선행 연구 등은 공통적으로 2008년 현재 '저축액 0' 세대율이 30%를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 도표를 보면, ‘저축액 0’ 세대의 수뿐만 아니라 취학원조 세대 및 생활 보호 세대 역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축액 0’ 세대가 약 25%(2005년 현재)라는 수치이다. 이는 일본인 4가구 중 1가구는 ‘저축액 0’임을 의미하고 있다.

일본에서 ‘저축액 0’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논의가 있다. 특히 가계의 자산이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축은 줄었지만 그 만큼의 돈을 투자에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돈의 양은 변함이 없다는 논의가 대표적이다.²⁴⁾ 분명히 2000년대 이후의 일본에서는 주식 및 펀드에 대한 투자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이들 투자자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며, 또 이들이 자신의 기존 저축을 해지하여 이를 투자로 돌리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²⁵⁾ 오히려 지금 일본의 경우, 상당수의 가계가 저축한 돈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여유는 거의 없는 상황인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세대가 지금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축한 예금을 정기적으로 인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 각 세대의 생활비 확보가 과연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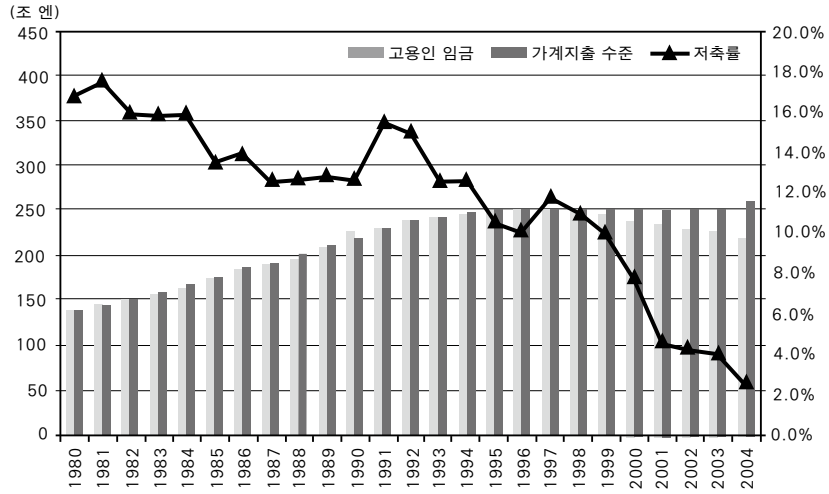
〈도표 7〉은 가계의 저축으로 충당되는 돈의 비중, 즉 저축률과 임금, 그리고 지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도표를 통해, 일본 가계의 저축률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이 끝난 2000년대 이후 일본 가계의 임금소득이 감소한 것과 가계의 지출이 증가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대기업들은 인적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 삭감

24) 노무라 애셋 매니지먼트의 조사(『第5回意識調査, 投資信託に対する意識調査』)가 대표적이다.

25) 나가타 마사히로(永田雅啓)에 의하면, 일본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주식투자 등과 같은 예금 이외의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1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금 이외의 자산운용을 위해 기존 예금상품을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하는 경우는 전체 예금자 중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永田雅啓, 「貯蓄率はなぜ下がったか: 日米家計貯蓄動向の要因分析」, 『季刊国際貿易と投資』第55号, 2004.

〈도표 7〉 일본의 저축률, 임금, 지출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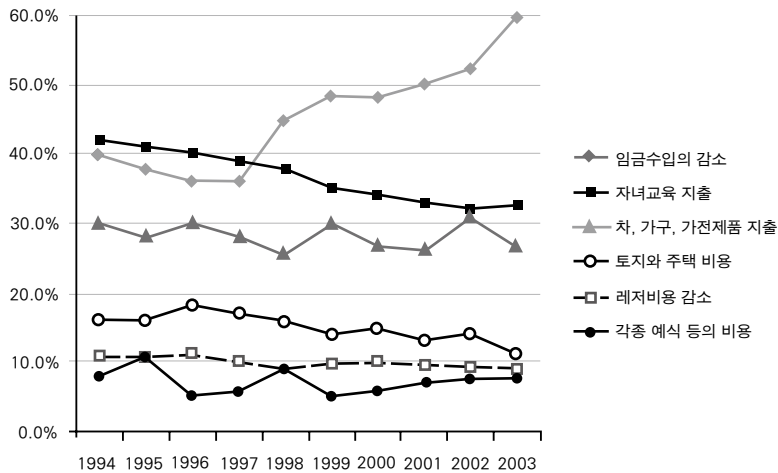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국민경제계산」

을 매우 순조롭게 단행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정책의 최고 목표로 설정한 정부가 대기업의 인건비 삭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내각의 대기업 관련 지원 방안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또 노동자들이 인적 구조조정 등과 같은 전격 해고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역시 대기업이 인건비 삭감을 쉽게 해낼 수 있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해고 노동자들이 어떠한 집단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노사 간의 충돌 및 사회 전체의 갈등도 초래하지 않고도 대기업에 의한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었으며, 또 그 결과, 기업에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강권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 가계에서는 임금이 상승하기는커녕 감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가계 지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가계 소득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계는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이와 같은 적자 국면에서 가계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저축해 온 예금을 인

〈도표 8〉 일본에서 저축 잔액이 감소하는 이유(설문조사 결과)



출처: 일본 문부과학성, 「저축을 저하의 주요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2005.

출하여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일본의 가계는 점차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저축을 깨서 부족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저축액 0'인 세대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도표 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임금 등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를 충당한 가계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것이 일본의 전체 저축액이 크게 줄어든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 이후 일본 가계는 임금이 감소한 데 반해 지출은 증가하여 결국 가계의 저축 잔액이 크게 감소하여, 현재 4가구 중 1가구가 '저축액 0' 상황에 빠져 적자 기조의 생활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계의 빈곤한 저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가계의 평균 저축액이 무려 1,600만 엔(2007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고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가계는, 이 '평균 저축액' 산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이 수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평균'이라고 하는 산출방법의 맹점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여, 일본의 평균 저축액 규모와 일반 가계의 생활 양상 간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교육격차

일본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친권자는 자식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민 중 꽤 많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의무교육에 필요한 소액의 교육비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취약한 교육 환경에 빠진 세대는 1990년대부터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취학원조’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해, 주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교과서 및 도서 구입비, 학교 급식비, 통학 및 귀성에 소요되는 경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학용품 구입비 등의 경비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에 맞춰 지급되고 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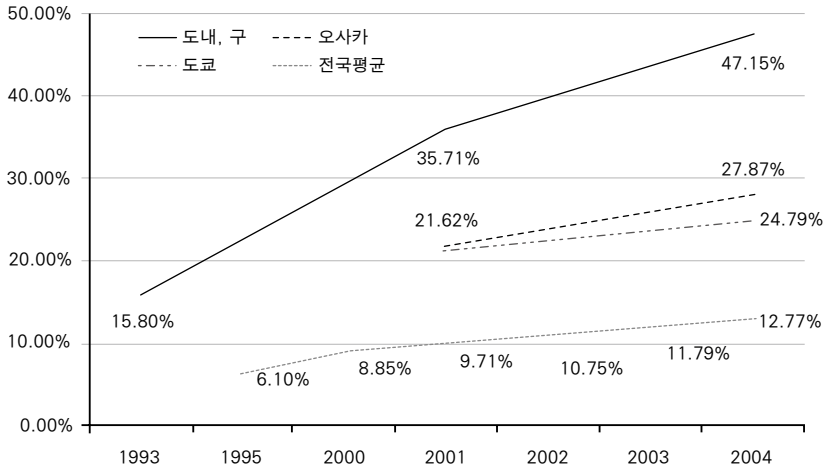
‘격차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일본에서는 경제적 궁핍 때문에, 이러한 ‘취학원조’ 제도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정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의 <도표 9>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일본의 초·중등 학생 중에서 ‘취학원조’를 받고 있는 학생의 비중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도표를 보면, 일본 전 지역에서 취학원조를 받고 있는 학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유층이 집적해 있는 도쿄 및 오사카 등과 같은 대도시권에서 오히려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쿄도 내 어떤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무려 40%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지방의 중소도시에 비해 오히려 대도시권에서 부유층 가정과 빈곤층 가정의 차가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대도시권에서 교육격차가 보다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체 초·중등 학생이 작성하는 졸업문집 중 ‘장래희망’란에 약 30%의 학생들이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다.²⁷⁾ 이

26) ‘취학원조’ 제도의 대상이 되는 가정(세대)의 수입 수준에 대한 결정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

27) 도쿄도 교육위원회 다케바나 유타카(竹花豊) 위원과의 인터뷰(2010년 11월 5일) 내용에 의거하였다.

〈도표 9〉 전체 학생 중 취학원조제도 수급자 비중의 추이



출처: 일본 문부과학성, '중의원에산위원회제출자료' (2006년 2월부터 활용하여 작성), 『도쿄 및 오사카 교육위원회 백서』

30%에 속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취학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궁핍해진 가정의 자녀들로, 부유층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래희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는 곧 부모 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를 초래하고 또 '희망격차'를 조장하여 이는 또 결국 자녀 세대의 소득격차를 극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의 고용격차 및 소득격차 등의 경제격차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격차가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결국 저소득층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절망하게 만든다는 점임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도쿄도 내의 주택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도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급 주택들이 즐비하고 부유층들만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²⁸⁾ 도쿄도 내 23개 구 중에는 매우 낡은 도영 주택 등지에 빈곤층이 매우 높은

28) 예를 들어, 도쿄도 내에서는 오타구(大田区)에 위치하고 있는 덴엔조후(田園調布) 지역은, 도쿄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최고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호화로운 주택이 즐비하고, 사립학교 중심의 교육시설을 비롯한 부유층 문화에 정합적인 지역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밀도로 모여 살고 있다. 일본 도시 중 가장 부유층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도쿄 역시 극소수의 부유층 ‘가치구미’가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의 사람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의 경제적 궁핍함으로 인해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자녀를 무려 연 평균 200만 엔이나 소요되는 고액 교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립중학교에 보내는 가정도 많다는 것이다. 일본 도쿄도 내 각 구의 사립중학교 진학률과 취학원조율을 동시에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일본의 ‘교육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²⁹⁾ 즉 사립중학교 진학률과 취학원조율은 완전한 반비례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쿄는 ‘교육격차’가 일본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며, 일본 각지의 대도시권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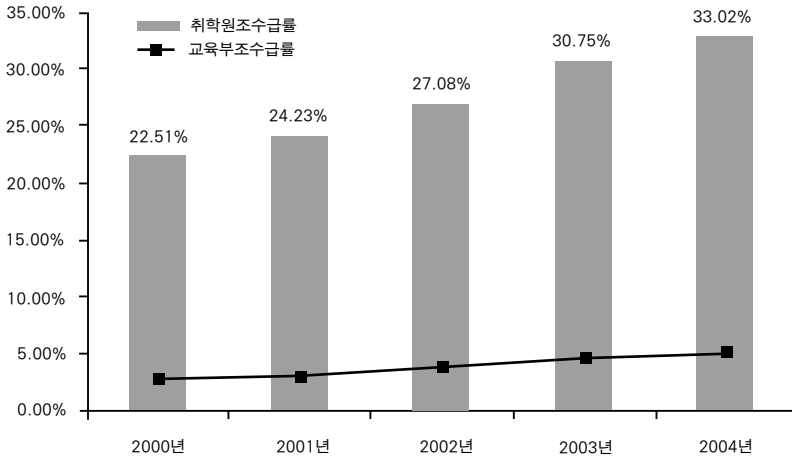
그런데 일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초중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취학원조’의 영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취학원조’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10년 전에 비해 무려 약 2.5%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³⁰⁾ 이와 같이 ‘교육 소외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 세대의 궁핍한 경제적 사정에 의해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밖에 받지 못하여, 일본에서 결국 고등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도표 10〉은 지역 간 격차가 심하고 또 일본 전체 현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고치현(高知縣)의 취학원조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도표에 의하면, 공립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3명 중 1명이 취학원조를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고치현에는

29)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2010년 10월에 발표한 ‘통계조사보고서’, ‘진로상황조사편(進路状況調査編)’을 보면, 도쿄도 내에서 초등학생의 사립중학교 진학이 가장 많이 나타난 세 구의 사립중학교 진학률과 취학원조율의 경우, 주오구(中央区)는 진학률 40.7%, 취학원조율 14.4%, 지요다구(千代田区)는 진학률 38.8%, 취학원조율 6.7%, 분쿄구(文京区)는 진학률 38.7%, 취학원조율 15.4%로 나타나고 있다. 또 반대로, 도내에서 초등학생의 사립중학교 진학이 가장 적은 세 구의 사립중학교 진학률과 취학원조율의 경우, 에도가와구(江戸川区)는 진학률 11.1%, 취학원조율 32.9%, 아다치구(足立区)는 진학률 11.5%, 취학원조율 47.2%, 가쓰시카구(葛飾区)는 진학률 12.8%, 취학원조율 30.4%로 나타나고 있다.

30)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2010년 10월에 발표한 ‘통계조사보고서’, ‘진로상황조사편(進路状況調査編)’을 참조하였다.

〈도표 10〉 고치현의 취학원조 추이



출처: 高知民報(2008년 9월 7일)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주: 취학원조수급률은 전체 공립중학교 학생 중 취학원조를 받는 학생의 비중이며, 교육부조수급률은 취학원조를 받는 학생 중 교육부조를 받는 학생의 비중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교육부조'란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조의 일종이며, 경제적 이유에 의해 학업이 곤란한 학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취학원조에 비해 경제적 사정이 더욱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내용은 취학원조와 비슷하나 '학교보건법'에 의한 의료비도 포함되어 지원금액은 취학원조에 비해 많다. '교육부조'는 지자체 교육위원회의 인정에 의해 시군구(국고 반액 보조)가 지원한다.

메이토쿠 기주쿠(明德義塾) 학원과 같은 명문 사립중학교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며 전국 각지의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명문학교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 일본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교육격차'가 대도시뿐만 아니라 고치현과 같은 영세한 재정규모의 지방 자치체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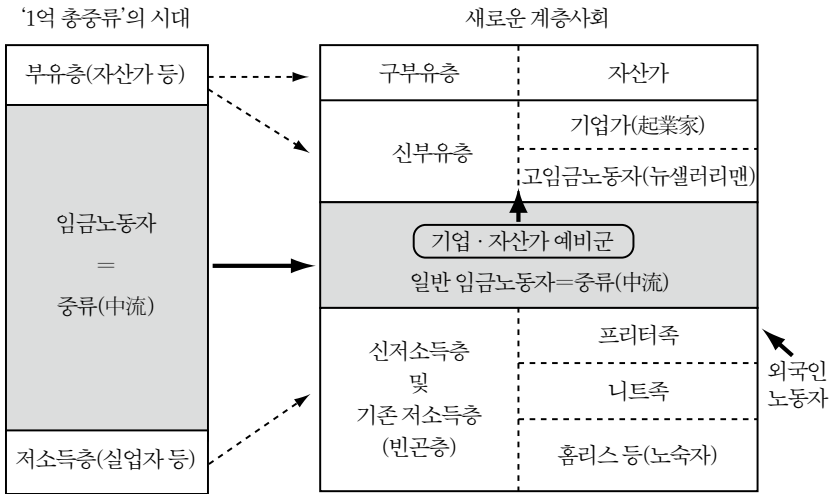
본고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일본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는 점차 줄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용격차가 확대되어, 일본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매우 열악한 고용 및 임금 조건하에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고용격차는 노동자 간의 심각한 소득격차를 초래함으로

써, 일본을 ‘격차사회’로 급속하게 이행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본고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이와 같은 고용 및 임금 등의 노동시장 변수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은 비정규직 노동자 가정, 저소득층 가정, 풍부한 자산을 갖지 못 했던 가정,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된 가정을 둔 가정, 나아가 기업 내부의 성과주의적 임금체계 속에서 하향 이동하게 된 가정을 둔 가정의 수입을 크게 떨어뜨렸고, 이들 가정의 빈곤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정은 생활을 위해 기존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생활비를 확보하는 등, 자산 면의 중류층 해체 역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과 2004년을 비교하면, 불과 5년 동안 임금노동자 세대의 평균저축의 분포가 크게 변화하였는데, 저축액이 1,400만 엔 이상의 부유층 가구 비중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에 반하여, 저축액이 400만 엔에서 1,200만 엔 사이의 저소득층 가구 비중은 전체적으로 줄었고, 역으로 저축이 200만 엔 이하의 가구 비중은 5%나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최근 다수의 가구가 중류층에서 하향 이동함으로써 중류층 비중이 크게 저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저축액 0’ 세대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 전체 저축률도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사회의 이른바 ‘마케구미’ 세대의 생활 궁핍화 현상은 이들 자녀에 대한 교육 접근의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결국 또 다시 고용격차 및 소득격차, 그리고 저축격차로 고착화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른바 ‘교육격차’는 ‘학력격차’를 낳고, 또 이로 인해 고용 및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나아가 결국 일본사회 전체의 ‘격차’가 재생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생산되고 있는 ‘격차사회’ 구조하에서 일본 내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층구조가 조성되고 있다.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일본의 고용 및 소득 격차는 사회전체의 중산층 비율을 축소시켜 다양한 계층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저소득층에서는 ‘프리터’, ‘니트’로 불리는 신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반면에 부유층에서는 기업 내 ‘경영 엘리트’로 불리는 고임금 노동자층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고용 및 임금 양극화, 또 이로 인한 저축 및 교육 양극화는

〈도표 11〉 일본 내 새로운 계층사회의 형성



출처: Nikkei Business(2005년 7월 18일자)에 입각하여 재구성한 양준호의 논문「日本の市場主義的制度改革と所得不平等の深化」(『韓日經商論集』第42号, 2009)에서 인용하였다.

일본의 새로운 계층구조를 형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증가로 인한 ‘소비 격차’ 역시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의 ‘격차사회’는 일본인들의 ‘생활’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 극도로 확대된 소득격차는 소비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소비심리 위축 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사회의 양극화 세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서, 최고급 명품과 초저가 제품의 판매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루이비통과 100엔 숭의 사회’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이다.³¹⁾ 또 ‘격차사회’하에서의 일본 저소득 계층은 이전과 같은 ‘기업전사’적 생활을 선호하지 않는다. 즉 ‘격차사회’ 이후의 일본에서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맹목적 충성만이 자신과 가족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국민적 정서가 약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유목민형’ 생활

31) 루이비통은 2008년 일본에서 2,000억 엔의 매출을 올렸고 대표적 매장인 도쿄 아오야마(青山)점 6층의 전용매장에서는 엄선된 회원에게만 루이비통의 희귀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반면에, 100엔 숭인 ‘다이소산업(大創産業)’은 2,400여 점포에서 1일 매출이 약 8억 엔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면, 일본의 소비격차 또는 소비양극화는 매우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선호하여 기업에 종사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전문직에 대한 지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이전과 같은 기업 내부 노동시장보다는 사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개인 능력투자가 일반화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저축격차 및 교육격차로 인해 개인간 능력투자의 격차마저 초래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인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 개인의 능력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볼 때, 이제 더 이상 일본은 ‘기업’이 또 ‘법인’이 추동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문초록

‘격차사회’ 일본과 빈곤층 재생산 | 양준호

투고일자: 2010년 12월 6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본고에서는 ‘격차사회’ 일본의 고용 및 소득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상을 관련 통계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일본인들의 ‘생활’패턴에 대해 큰 규정성을 갖는 저축 및 교육과 같은 개별 가계의 기본적인 요소의 격차를 초래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생활’이 이전과는 달리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현재 일본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는 점차 줄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용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또 이는 노동자 간의 심각한 소득격차를 초래함으로써, 일본을 ‘격차사회’로 급속하게 이행시켰음을 알 수 있다. 고용 및 임금 등의 노동시장 변수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은, 비정규직 노동자 가정, 저소득층 가정, 풍부한 자산을 갖지 못했던 가정,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된 가장을 둔 가정, 나아가 기업 내부의 성과주의적 임금체계가 초래한 양극분해 구조하에서 하방 이동하게 된 가장을 둔 가정의 수입을 크게 떨어뜨려, 기존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생활비를 확보하게 하는 등, 이들의 빈곤을 점차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사회에는 ‘격차사회’의 도래로 인해 각 세대의 궁핍화 현상이 현저했고, 또 이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접근의 양극화가 초래됨으로써, 결국 또 다시 고용격차 및 소득격차, 그리고 저축격차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교육격차’는 ‘학력격차’를 낳고, 또 이로 인해 고용 및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이는 결국 일본사회 전체의 ‘격차’를 재생산하고 있다.

주제어: 고용격차, 소득격차, 저축격차, 교육격차

일본의 고용전략 변화: 비정규직과 제2안전망 | 은수미

투고일자: 2010년 12월 1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21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이 글의 목적은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의 일본 고용전략 변화를 파견법 개정 논의와 제2사회안전망 도입을 중심으로 살펴봄, 일본정부의 고용전략이 바뀐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에 던지는 함의를 짚어 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파견법 개정 논의는 2008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뚜렷하게 바뀐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1985년 도입한 파견법을 1999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2003년 파견 허용 범위를 제조업으로까지 확대했던 것과 달리, 2008년부터는 제조업에서의 파견 및 일일파견 재규제, 고용의무 조항 삽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파견법을 국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정부는 2008년부

영문초록 Abstract

The Japanese Classed Society and Reproduction of The Poor _ YANG Jun Ho

This paper examines the employment and income gap disparity in Japan, or so-called “kakusa-shakai” phenomenon,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clues that infer the changes in the “life” of the Japanese people over time. For, this sort of disparity in labor market has caused the disparity of the basic factors within each household, such as saving and education, which used to stipulate the conditions for the Japanese ‘life pattern’. The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that Japan has shifted into a ‘society of disparity’. The growing employment disparity means that the number of permanent employees is gradually decreasing while that of temporary employees is rapidly increasing, which causes serious income gap among the workers. This extreme polarization phenomenon of Japan’s labor market is being observed in various patterns, all of which leading to the reduction of family income. The examples of these patterns include: temporary employee’s family, low income family, the family with no particular asset, the family whose breadwinner has lost his/her job due to structural adjustment, and the family whose breadwinner went through lowering of his/her wage due to the performance-based pay system under the bipolar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We know that their poverty-levels have been gradually worsening because these families withdraw from the saving deposits for their living expenses. Likewise, the advent of ‘disparity society’ accelerates the immiserization phenomenon, which is becoming ever more conspicuous when we look at the polarized access for children’s education. Ultimately, we observe the establishment of the vicious cycle, which fixates the employment disparity, the wage disparity, and the saving disparity. The education disparity begets educational background disparity, and this causes the worsened employment and wage disparities. Finally, it reproduces the ‘disparity’ within the entire Japanese society.

Keywords : employment differentials, earning differentials, saving gap, inequality of access to education institution

Changes in Japan’s Employment Strategy: Temporary Employee and the Second Social Safety Net _ EUN Soo 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hift in Japan’s employment strategy (from “deregulation” to “stronger regulation”) with focus on the current discussions regarding the revisions of the Worker Dispatch Ac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econd social safety net. It will try to analyze the causes of such changes in the strategy and to identify its implications for Korea.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Worker Dispatch Act took a drastically different course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Act was enacted in 1985 and it was changed from a positive system to a negative system in 1999, and in 2003 the job scope was expanded to manufacturing sectors. But since 2008, the Diet has been deliberating on an amendment bill, the gist of which consists of the re-regulations on dispatch as well as on daily dispatch in manufacturing and the new provisions on the obligation of direct hiring. Second,